

벼 주요 해충, 이제는 친환경 농자재로…

백 채 훈
간척지농업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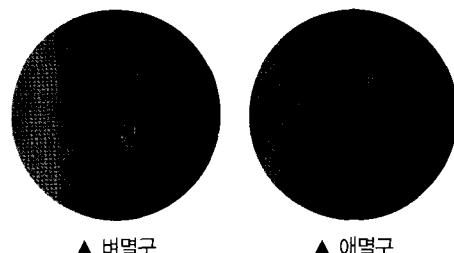
벼 해충의 종류와 피해

벼를 가해하는 국내 해충으로는 약 14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해충으로 벼멸구, 애멸구 등 멸구류와 혹명나방, 벼애나방 등 나방류가 있다. 벼멸구와 애멸구는 벼의 줄기와 잎을 흡즙하는 해충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특히 애멸구는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해충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중국에서 날아와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애멸구는 줄무늬잎마름병의 매개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벼를 직접 가해하기도 한다.

혹명나방과 벼애나방은 벼, 옥수수와 같은 벼과 작물의 잎을 가해하는 나비목 해충으로 혹명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오며, 이를 나방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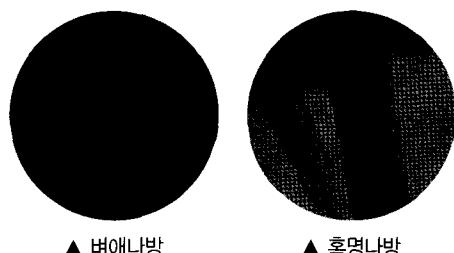
벼 멸구류 및 끝동매미충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효과

벼에 발생하는 멸구류 및 끝동매미충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효과가 우수한 몇 가지 친환경농자재에 대해 살충효과를 조사했다. 세 가지 해충에 대해 담제제, 담추출물, 식물추출물, 멸구슬+고삼추출물 및 고삼+계피추출물의 성분이 든 친환경농자재가 모든 해충에 우수한 살충효과를 보였다.



실내에서 벼멸구에 효과가 우수한 몇 가지 친환경농자재를 대상으로 벼 포장 조건에서 이들 자재의 지속효과를 조사한 결과, 식물추출물의 친환경농자재는 처리 후 약 10일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담제제 등 일부 친환경농자재는 처리 후 20일까지 벼멸구 밀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벼 나방류 해충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효과



벼에 발생하는 혹명나방, 벼애나방, 멸강나방, 줄점팔랑나비를 대상으로 실내에서 살충효과를 조사

표1. 벼 포장에서 친환경농자재의 흑명나방 방제효과

친환경농자재 (성분명)	농도 (배수)	사전 피해엽률 (피해엽수/10주)	방제효과(%)	
			3일차	7일차
천연추출물+미생물제	1,000	3.9	59.9	85.2
천연추출물	1,000	4.7	57.7	78.3
고삼추출물	1,000	2.8	55.3	62.5
미생물제제	1,000	3.3	33.4	45.3
부프로페진· 에토펜프록스(대조)	1,000	3.2	76.3	89.0
무처리	-	3.0	-	-

한 결과, 천연추출물+미생물제, 먹구슬+고삼추출물 등이 살충효과가 우수했다. 실내조건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친환경자재에서, 흑명나방은 천연추출물+미생물제 등 6종, 벼애나방은 7종, 멸강나방은 5종, 줄점팔랑나비는 7종이었다.

실내에서 흑명나방에 효과가 우수한 몇 가지 친환경농자재를 대상으로 벼 포장조건에서 이들 자재의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표1) 천연추출물+미생물제와 천연추출물이 각각 85.2% 및 78.3%의 방제

효과를 보여 다른 친환경농자재에 비해 방제효과가 우수했다.

벼 해충 발생과 전망

벼에 발생하는 벼멸구, 애멸구 및 흑명나방 등의 해충들은 친환경 농업지대에 발생되어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우수한 농자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벼의 주요 해충인 멸구류 등에 대해서는 살충 활성이 높은 우수한 식물추출물을 선별하고 나방류 해충에 대해 곤충병원성세균으로 잘 알려진 BT균을 선별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 고시된 일부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한 적용시험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살충활성이 우수한 물질이 개발되면 친환경농업의 주요 농자재 중 하나인 친환경 방제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1년 7월호〉

착한 녹비작물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박승용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정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선진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 한국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며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음.